

썰렁한 아파트 단지 상가들 손님은 없고 '임대'만 나부껴



3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유리창마다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광주시 동네 상권이 소비침체, 인구 감소,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으로 쇠락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르포 - 광주 동네 상가 가보니

“요즘 주변 상가는 대부분 공실이어서 썰렁합니다. 당일 저녁밥 재료조차 그 날 새벽에 온라인 배송해버리는 시대니까요.” <관련기사 3면>
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이른바 ‘하남 지구’로 불리는 인근 지역의 하남 주공아파트 앞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지난 1990년대 광주 대표 상권 중 하나로 자리잡은 하남은 근처에 구 하남플립버스 시내마, 이마트 광산점 등이 들어서고, 소규모 지역 시장인 우산매일시장 등이 활기를 불어넣는 등 호황기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연이은 인구 감소,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 정착, 온라인 유통업의 발달에 따라 북적였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여년 동안 동네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했던 한 수선집은 어려워진 경기에 점포 정리 문구를 붙이고, 재고털이에 나서는 모습이였다. 인근 상가 건물마다 1~2개의 공실이 발생해 임대 문의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고, 오랫동안 한 자리만 지켜오던 상인 대부분은 어두운 표정으로 텅 빈 거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등장에 이어 온라인 유통업의 확대가 동네 상권 몰락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걷는 사람조차 없어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해볼 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2년간 청과점을 운영해 온 김모(여·58)씨

대형마트·온라인 유통 확대에 상가 건물마다 1~2곳 ‘임대’ 지역경제 ‘터줏대감’ 위상 옛날 상인들 텅 빈 가게 보며 ‘한숨’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하다 못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상가 및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꽤 있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단골손님을 많이 만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온라인으로 집에서 배송시켜버리니 동네 점포들은 저렴한 가격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손님을 만나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동네 상권으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거 인구가 보장돼 인기가 높은 만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상 낙찰가를 웃돌고 심지어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시들하다.
같은 날 오후 방문한 광주시 동구 용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570세대 규모 이 단지에는 17개의 상가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 중 4곳이 임대 상태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는 주변 상업시설보다 임대료가 비쌌어도 불구하고, 임대하려는 상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단지 내 상가는 보통 부동산업자들이 매입한다. 과거엔 많게는 1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가 임대 등 거래가 안되다보니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도맡아왔던 동네 상권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동네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한 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자 감소,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한 결과다.
이에 따라 동네 상권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네 상권의 대부분을 이루는 소규모 상가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전년 2분기(8.1%)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9.2%를 기록했다. 전남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7.5%로 전년 2분기(6.5%)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광주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기준 16%로, 전년 2분기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13.8%)치를 웃돌았다. 전남은 전년 2분기(12.8%)보다 0.9%포인트 늘어난 13.7%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군공항 이전 정부가 나서야

“군·민간공항 모두 국가시설... 왜 지자체가 옮겨야 하나”

주호영 국회부의장 토론회 참석
“광주·대구 힘 합쳐 제대로 개발”

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가 ‘국회, 광주의 날’ 이틀째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 이슈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군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을 길게는 5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도시들에게 ‘당신들이 옮기고 땅 팔아서 값 가져가라’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구조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이 1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 사업이고,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10조원 이상의 돈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 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차액이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로, 국방부는 국방 예산 중에서 군공항 이전으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광주시의 공항이고 대구시의 공항이나, 국가의 공항을 왜 지자체가 옮겨야 되나.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기재부와 국방부를 성토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공항을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가 이 절차를 대행해 주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도 옮기는 것도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끌어안고 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이어 “(광주와 대구)같이 힘 합쳐서 공항 옮겨서 번듯한 공항 만들고 기존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당도 적극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에는 공항이 꼭 필요하고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면서 “군 공항 이전 시 무안공항은 완충지역까지 포함하면 500만평이 넘는 대형 신공항으로, 공항 도시가 하나 생겨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관정 연석회의도 추진중이다. 광주·전남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4년 만인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조선대병원 노사 6일 만에 파업 철회 ▶6면
- 전남의 혈맥 - 흑산공항 이르면 연내 착공 ▶11면
- KIA 마운드의 희망 '조커' 김기훈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

생명·평·응·품·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구정책과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1401호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전남귀농산어촌
누리지원 바로가기

전남귀농산어촌
카리오탁 상담하기

귀농TIME
유류브 바로가기